JUST POLITICS Essay

한국정치의 이해와 참여

DREAMY SCHOOL 3P Electives JUST POLITICS
dreamyedu.net 041-557-0179

2030청년의 정치 참여 급증 원인

2030 표심, 대선판을 흔들다

전통적인 '정치 무관심' 세대로 꼽혀온 2030의 투표율이 최근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2030 청년, 즉 젊은 세대는 전통적으로 진보적 정치 성향을 나타냈다. 2017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2030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임기 초만 해도 가장 큰 지지세력 중 하나였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많은 청년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든다. 왜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는가? 혹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청년들은 그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이 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한 것일까. 2017년 대선 때 20대는 76.1%, 30대는 74.2%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대선 중 가장

△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BNB 타워에서 열린 JP희망캠프 해단식에서 2030 세대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1.11.8 / 뉴스1)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2007년 대선 당시 20대 투표율은 전 연령대 중 최저였다. 2012년 대선과 비교해도 다른 연령대 투표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2030 세대의 투표율만 올랐다. 그만큼 청년 세대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세대로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만 봐도 내년 3.9 대선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기류가 심상찮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2030男이 홍준표를 지지하게 된 이유

지난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홍준표는 '막말 준표'란 별명이 생길 정도로 청년들이 싫어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주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홍준표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나 홍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2030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불과 4년 만에 청년층 표심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그들이 야당을 지지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20대 탈여당의 출발, 공정

진보적 성향이 강했던 청년층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내로남불'로 조롱받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타락한 모습이 꼽힌다. 앞장서 촛불을 들었던 2030세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정의로운 결과'가 무너진 모습에 큰 실망을 느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20대가 90%에 달하던 이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건 2018년 초, '공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선수들의 기회를 다소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 반발 속에는 정치 논리에 따라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날 '공정 DNA'의 20대가 공정에 민감한 건 그들이 유달리 속이 좁거나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다. 경쟁의 강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경쟁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경쟁의 보상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과거에는 대학에 안 가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일자리 간 격차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삶의 수준이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갈린다. 시험문제 하나로 대학의 당락이 갈리고, 그 대학이 일자리의 수준을, 일자리의 수준이 삶의 계층을 결정짓는 현실에서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진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내세운 가치들은 늘 공정과 대립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 '아빠찬스' 논란이 그러했다.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정책 실패와 위선적인 태도에 염증을 느낀 것이다.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는 입시와 취업이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고 느낀다.

경쟁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뿐, 사실 이들은 불평등이 몸에 배어있는 세대이다. 태어난 집안, 지역에 따른 삶과 꿈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세대가 하나의 의제로 뭉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나, 그럼에도 공통된 부분은 하나 있다. 남북단일팀 구성부터 최근의 부동산 폭등과 LH 사태까지, 청년들의 요구는 다른 듯해도 일관되었다. 우리 일상에 놓인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과 비전을 갖춘 세력에 표를 주겠다는 것이다. 취업과 학자금, 아르바이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개발보다, 정당 간 밥그릇 싸움이나 사리사욕을 앞세운 정쟁을 비판하는 것이다.

세대별로 느끼는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서울시 연구원)

젠더갈등에 대한 여권의 인식

20대는 학창시절에 교복을 입고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경험했다. 대체로 보수 정권에 비판적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세대로 분류되기도 한다. 동시에 남녀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세대이다.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들의 불만은 단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여성경찰 채용이나, 성인지 예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인지감수성 판결'처럼,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성의 편에 선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의 여론은 젠더 이슈에 정부 여당이 편향적으로 개입한다고 느껴졌을 때 출렁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혜화역 시위'에 참석한 소감을 SNS에 남겼을 때와, 여권 정치인들이 '이수역 사건' 발생 초기에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이를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하자 청년들은 지지를 철회했고, 이는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이어졌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연령대별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대남'의 72.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60대 이상 남성들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60대 이상 유권자 표심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이를 손쉽게 '보수화'로 규정할 상황은 아니다.

18~29살 연령대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60.1%를 기록한 반면, 박영선 후보는 21.1%에 그쳤다. 30대와 50대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에 앞섰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살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 후보가 70.5%를 기록했다. 연령별 지지율에서 유일하게 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지른 40대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린다.

오세훈 선거캠프는 이준석의 주도로 '2030 시민유세단'을 기획해 흥행에 성공했다. 청년층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 발언할 기회를 줌으로써 집권 여당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도록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홍준표는 '공정'에 민감하고 여성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여성가족부 폐지·사법시험 부활·수시전형 폐지 등을 공약하여 '이대남'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현 정권의 20대 남성을 등한시하는 정책에 대해 반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20대의 정치 참여는 증가했다.

진영논리와 이념정치의 극복 필요성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은 이념에 따라 '우리 편'을 찍는 진영투표가 아닌, 사안별로 개인적 이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신투표'를 한 결과이다. '공정 DNA'의 20대에게 민주당은 이미 진보 아닌 기득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선택적 정의와 내로남불, 오만에 분노했다.

민주세력, 개혁세력이기에 뽑아야 한다는 구호는 더는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진영에 따른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 이것은 현 여권이 과거 지역주의를 비판할 때 주장한 메시지다. 정치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 사람을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 방식은 기성 세대와는 다르다. 기성세대가 선거와 투표로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방식은 다양하다. 이들은 정치판에 관심이 크지만 직접 나서는걸 꺼려한다. 그러나 익명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활발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 기득화한 기존의 정치판에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그들만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이념갈등에서 자유로운 세대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영광을 모두 누리며 자랐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악행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띤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일 수 있다. 이제 청년들은 구시대적 이념에 사로잡힌 채로 정치를 바라보지 않는다. 철저히 상식을 바탕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한다. 이들에게 이념논쟁과 갈라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중앙일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연령대별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대들로선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룩한 586의 업적을 감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철저히 현재의 모습들로 정치권을 판단한다. 걸핏하면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늘 검찰·보수언론·재벌 대기업을 기득권으로 매도하지만, 청년들 눈에는 그들 역시 명문대학을 나와 강남에 살면서 법이 바뀌기 전에 월세를 올리는 기득권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직접 목격한 적 없는 이들에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보다,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가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의 신지예 영입

△ 20일 여의도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김한길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0 / 중앙일보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는 20일 '신지예 영입'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지지자들의 말이 많다. 신지예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힘은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이 될 수 없죠"라는 트윗을 올린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새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신지예 부위원장의 영입으로 배신감을 느꼈다며 탈당하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기존 야당 성향의 커뮤니티 중 반 윤석열 진영은 물론, 원래 윤석열을 지지하고 밀어주던 커뮤니티마저 윤석열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모두가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홍준표 또한 '청년의꿈' 플랫폼에 신 부위원장 영입을 묻는 질문에 "대선에서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 "정신 나갔네요"라는 답글을 달았다.

신지예가 속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도 SNS에 지지 철회와 단체 탈퇴의 뜻을 잇따라 밝혔다. 과연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온 국민의힘과, 이를 비판해 온 그녀가 결합할 수 있을까.

신지예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정치인으로서는 아무런 임팩트를 못 남긴 사람이면서도, 국힘당에 영입되자 반대 하나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을까. 신지예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자. 신지예는 2011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한다. 그리고 곧 탈당하여 2012년에 녹색당에 입당한다. 최근까지도 녹색당 소속이었다. 이후 녹색당 대의원, 녹색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동운영위원장 등으로 지내고, 2021 재보궐선거 후보에도 등록한 바 있다. 당시 그의 슬로건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 신지예의 정치활동은 페미니즘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서울시장 출마 당시 공약을 보면, 서울시와 협업하는 모든 기관과 시민단체는 이행각서를 써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이행각서 도입과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조례가 있다. 몰래카메라를 찾기 위해 엄청난 수의 경찰과 인원을 투입해서 2만 건 가까운 출동 끝에 얻어낸 적발건수가 0건인 것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4개의 젠더건강센터 구축과 서울시의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50%는 여성을 채용하는 성주류화 공약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성평등 일터 인증제, 동반자 조례 재정, 채식 선택권 도입, 청년 기본 소득제 등의 각종 친여성 정책만을 내세웠다.

과거 GS25 남성혐오 논란 당시 100분 토론에서 "작은 걸 크다고 해서 문제냐, 큰 걸 작다고 해서 문제냐"고 말했고,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라며 "욕설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일행이 폭행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간담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n번방 방지법' 개정 의견을 두고 "검열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고,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던 입장과 국민의힘의 탈원전 반대 주장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국민의힘 당론과도 상충하는 인물이다.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불과 며칠 전까지 비난을 일삼았다. 지난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되자, "여성혐오와 차별적 언동을 행하는 인물이 제1야당 대표가 되는 건 달가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7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자,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기고문에서는 "양아치와 조폭 중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라고 했다.

착각의 한국정치와 2030의 반문/항의

정치인의 선택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성취에 힘을 보탠 지지자들에게 설명할 근거와 맥락이 있어야 한다.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그가 국민의힘으로 간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으니 이번엔 윤석열의 약속을 믿어보겠다'는 것뿐이다. 윤석열의 약속이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정치권은 이상하게도 어느 계통의 누군가를 영입하면, 그 사람을 따라 사람들이 우르르 그 정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청년을 영입하면 청년들이 우르르 그 당을 선택하고, 바둑 기사를 영입하면 알파고에 감동해서 자녀들을 기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그 당에 투표할 것이라 착각한다. 지역기반 지지세력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존재하나, 사람들은 영업 인재의 직업이나 직군, 나이, 성별 하나만을 보고 지지 정당을 옮겨 다니지 않는다. 그에 맞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지지를 옮겨가는 것이지, 페미니스트 인물 한 명을 영입한다고 해서 전국의 페미니스트들이 국민의힘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누구도 신지예를 따라 국민의힘 지지자로 돌변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더라도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2030 청년층은 신지예를 피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캠프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현대 시대 정신이 안티 페미니즘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은 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 염증을 내는 것일까.

그들이 설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안 되는 그들이 목소리만 크게 내면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회사에서 해고되고, 가게가 문을 닫는 등 단지 소수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모두가 자유를 침해당하고 권리를 빼앗기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이 싫기 때문이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편도 한 발 물러서야 상황이 진정되는데,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다가오는 그들을 보고 계속해서 물러서고 물러서다 "이게 뭐냐, 더는 못 물러서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현재의 2030 청년 세대이다. 이것이 좌와 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과 이재명 지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청년, 그리고 이제는 그 연령대 이상 계층의 상당수도 '페미니즘'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이다. 가서 보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MLB 파크, 클리앙, 보배드림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좌우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이것은 혐오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다. 여성들조차 절대다수는 저들에게 반대한다.

청년들이 저들에게 반대하는 것은 그저, "내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고 싶다는 선언이자, '내가 저들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저들은 나를 건드리냐'는 반문이자 항의다. "왜 가만히 앉아 밥을 먹던 우리에게 밥을 먹던 우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고서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모여 집회를 여느냐"하는, 더는 못 참겠다는 이대남들의 비명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에게서 지지를 얻기위해 청년들이 몸과 마음을 모아 반대하는 단 한 명을 지지기반을 넓히고 철학을 확장하기 위해 그를 영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이히만'을 데려오는 것과 같다. "철학을 확장하기 위해 신지예를 영입한다"는 말은 곧, 우리가 가진 철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가야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쉽다. "자유로운 사회,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될터인데, '문재인이 망쳐놓은 나라를 돌려놓을 수 있다는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해 안달이다. 이재명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2030이 그렇게 보는 것이 예의일지도 모르겠다.

글 신주연

윤석열 후보 선대위 개편

사진: 데일리안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윤석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이다. 이 명칭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12월 7일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로 결정되었고 약칭은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로 결정되었다.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총괄하지 않고, 본부 6곳과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중앙선대위의 통제를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11월 23일 이수정의 영입부터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소위 '윤핵관'과 이준석 당 대표자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울산 회동을 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셔오는 등, 당시에는 봉합되었다고 생각되었으나, 이후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주었다.

12월 20일, 신지예는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 캠프 중 '새시대준비위원회'에 김한길에 의해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되었다. 영입과 동시에 '대선전환추진위원회' 대변인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하태경 의원은 2차례, 홍준표 의원은 여러 차례 이날 비판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된다. 보수, 진보 정당으로 정당 특색이 완연하게 갈려 있어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안 된다. 국민의힘의 '자유주의'에는 공동체 존중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평했다. 이준석 당 대표자는 "만약 지금까지 하던 주장을 지속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면 강한 비판을 받을 것. 이준석이 당 대표인지 모르고 들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 지켜보겠다. (이수정 교수 때처럼) 철학이 충돌하면 당대표가 당연히 우선이다"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규모가 무지무지하게 커 코끼리, 항공모함 같다. 김한길 위원장은 만나본 적도 없는 한 지붕 다른 가족이다. 신지예의 영입 사실을 발표한 다음에 알았다. 발표 후 여기저기서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름 있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영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사전조율, 협조가 부족할 경우 선거에 해를 미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 힘 외부의 반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선거를 영입이 망친다", "착잡하다. 축하드리기 어렵다.", "우파 정당에서 김여정을 영입한 수준이다" 등 신지예 영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다. 2021년 12월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자 겸 상임선대위원장과 조수진 최고위원 겸 선대위 공보단장이 국민의힘 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응 기조를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하여 설전을 벌어졌다. 12월 21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모든 직책인 홍보미디어총괄본부, 상임선대위원장을 내려놓고 사퇴했다.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을 표면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봉합되었던 선대위 내부 갈등이 전면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 당직자 집단 사퇴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1월 2일 윤석열 대선후보는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를 선정한 이유는 독실함 등이 아닌 "목사님과 친하지는 않아도 인사를 드려서 골랐다."고 발언했다.

사진: 매일경제

같은 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의 모든 메시지, 연설문 전부 다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나이 60이 다 된 성인이 자기 아버지뻘 되는 인물에게 관리받아야 할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 차원에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족발집에서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 공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발표를 해서 '반값 임대료' 정책 공약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적힌 종이를 보면서 읽었는데 이조차도 잘 전달하지 않아, 보좌진이 공약 발표 도중 끼어들어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명성교회 예배와 족발집 사건을 다음 날 선대위 해체작업을 결단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1월 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있었다. 이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쇄신을 이준석 대표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해체작업을 사전에 몰랐기에, 기자들에게 "사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자 "선대위 개편, 후보 동의 구할 필요 없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후보 패싱 논란이 생겼다.

신지예가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잔류 여부가 종일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입니다. 특히 젠더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합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윤석열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사로 돌아와 서민금융 살리기 정책공약 발표를 마지막으로 선거 행보를 중단한다. 김종인이 살리는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후 윤석열 후보의 실언과 역량 부족 논란으로 지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22년 1월 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또한, 해당 발언이 나온 당일 오후 김종인은 국민의힘 선대위 당직자 집단 사퇴를 주도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제대로 소통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선이 2달 남은 시점에 후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1월 3일 김한길이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의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김병준, 김기현, 김도읍 등 선대위원장 9인과 총괄본부장 6인이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1월 4일 윤석열 후보는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의 위와 같은 의견과 달리

사진: 아시아투데이

김종인 위원장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후보가 결심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후보 측 기자회견에서 선대위를 해산하고 대선 때까지 선대위를 대신하는 선대본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홀로서기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자연스럽게 해촉 수순을 밟게 되었다.

1월 5일 김종인은 윤석열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뜻이 안 맞으면 서로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주변 사람들이 쿠데타니, 뭐니 이딴 소리를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대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연말부터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를 '갈아엎자'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 측은 '고쳐 쓰자'라고 맞서면서 신경전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관계자들은 선대위를 '썩은 하수구'에 비유하며 "김 위원장은 배관을 아예 바꾸자고 했고,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머리카락만 치우고 락스를 붓자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식적으로 선대위 해산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기존 선대위에 대해 "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며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했다. 선대위 쇄신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게 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들에게 실망을 줬던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글 오한음

사진: 연합뉴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언론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

박근혜 사면과 이석기 가석방의 의미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이석기는 가석방되었다. 완벽하게 상극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인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같은 날, 같은 기회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수감까지의 사연과 배경은 차치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을 내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고 이들의 출감은 과연 대선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우선,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 보수진영은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보수진영 인사들을 수사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에 주목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그 역할을 해냈다. 윤석열 캠프는 이러한 지탄과 분열을 막아보려 각종 논란들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워낙 큰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기에 박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는 윤 후보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존재 자체가 윤석열의 반대 극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가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 통합을 외치는 것이다. 윤석열 지지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당면한 선거 앞에서 과거는 묻어두자' 하는 메세지를 전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성격상 '대통합' 메세지를 내놓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분노로 판을 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나, 현재로서는 억측인 것 같다. 그러나, 가만히만 있어도 지지자들이 갈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이것을 주제로 사분오열되어 싸우는 중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의 사면은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그룹은 아예 조직적으로 강기갑을 지원하여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강기갑을 국회후보로 만든 전적이 있다. 정치 진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지만, 특정 지지자들은 오직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있을 뿐 '진영따위 애초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행동양식을 보여준 실제 사례인 것이다.

현재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이 감옥에 보냈는데 문재인이 풀어줬다"고 인식하는 여론이 크다. 그러나 앞뒤 얘기를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민주당 측에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그의 건강 악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만약 옥중에서 일이 났다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약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나왔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것으로 봐서, 이 또한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싶다"고 말한 이석기의 역할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대단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석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RORevolution Organization 등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조직들에는 새 질서가 들어섰다. '남쪽의 수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온 그도 사실상 의미있는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석기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명분이자 방어막으로 나온 듯 보인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지지층이 박 전 대통령을 미워하는 상황이기에, 박 전 대통령만 사면시켰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클리앙 같은 사이트에서도 이번 건으로 지지를 철회한다는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분노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석기를 가석방하고 한명숙을 복권시키는 것은 확실히 지지자들을 달래는 데 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벌어진 상황만 보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사면은 보수 진영을 둘로, 또는 그 이상으로 가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문재인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라면, 이석기의 석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화나게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의 가석방에 대해 분노한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최근 윤 캠프의 행보에 분노한 사람들이 '이석기는 영입 안 하냐?' '99가 달라도 1이 같으면 영입한다면서?' '이대남을 버리고 페미를 선택했듯이, 이제 지지자를 버리고 종북 표를 이끌어 내면 되겠네?' '종북으로 외연확장을 하면 되겠네?' 하며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그의 사면도 윤 캠프의 리스크가 확대된 것인데, 이석기의 가석방마저 되레 윤 캠프가 조롱 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따돌리고 있던 윤석열 후보가 단 몇 주만에 뒤집혀 오차범위 바깥으로, 민주당이 말하는 골든크로스가 되었다.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악재만 가득하다. TV토론이 시작되면 지금으로선 윤석열 후보에게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됐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후보가 나와 가장 생각이 맞닿아 있는, 가장 올바른 생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흠 없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 것이고, 아젠다도 영향력이 부족했을지언정 가장 올바르게 세팅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최재형 전 후보에게 가장 놀라고 감동했던 것은 '캠프가 자신을 망친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캠프가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미련없이 캠페인 도중에 선거캠프를 해체시킨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의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말실수 같은 것들은 지엽적인 이슈들이었다고 본다. 본질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 포장이 잘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윤 캠프의 전략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실수를 드러내 보였다.

20대, 30대는 단지 그 세대의 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젊은 층은 그 자체로 트렌드를 세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활동력이 커서 다른 유권자층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윤 캠프는 단 한 번도 젊은 층의 환심을 산 적이 없다. 젊은 층의 마음에 드는 말, 행동, 정책, 비전,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다른 연령층의 환심을 샀는가? 천만에. 이미 40대, 50대의 과반수는 이재명에게 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상태이고, 60대와 70대의 지지율 하나로 근근이 버티고 있으나 그마저도 하락 중이다. 시작은 50~60%를 넘나드는 지지율이었는데, 지난 랠리 내내 그 지지율을 잃고 이제는 오차범위 밑으로 쳐진 상황인 것이다. 이제, 만에 하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윤 후보를 반대하는 성명이라도 낸다면 그의 지지율 앞 자리가 1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캐스팅보트, 결정권이 될 만큼 지지율이 낮다는 말이다. 대선 전망이 좋다면, 결코 가만히 있는 박 대통령을 두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고집 그만 피우고 최재형 후보처럼 바닥부터 뒤집어 엎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하고 말해봤자 민지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들은 다음 공천, 청와대 수석 자리 등을 노리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살 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고 싶다면 전략이든, 지향점이든, 말투든, 캠프 자체든 갈아 엎기를 바란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글 신주연

최순실 게이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이 얼굴도, 정체도 모르는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던 최대규모 정치 스캔들이다.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 전직 비서실장이며 최순실의 전 남편이다. 최순실과 정윤회의 딸인 정유라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 전 승마 선수이며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다. 최태민은 승려 겸 목사 겸 사이비 종교(영생교) 교주인 인물로, 최순실의 아버지이다. 최태민은 1975년 육영수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육영수를 이용해 편지를 써서 박근혜의 환심을 샀다. 그 뒤로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죽기 전까지 활동하였다. 이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은 서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고 40여 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비선 실세는 어떤 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즉, 비밀리에 영향력을 가진 자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는 비선 실세가 종종 있었다. 보통 친인척들이 많았는데 박근혜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측근이 비선 실세를 하였다는 점이 다른 사건과 다르다.

2014년에 최순실 게이트와 비슷한 비선 실세 의혹이 있었다. 이 사건은 청와대에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비서관 세 명(정호성, 이재만, 안봉근)과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가 주요 인물이다.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하려면 꼭 이 셋을 통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은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자주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선 실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4년 11월 이 문건이 세계일보에 유출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야당과 대통령은 서울지검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박관철과 관련된 이들을 조사하였다.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관천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되었다.

대기업들은 자금을 출연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두 재단을 만들었다. 이 두 재단은 신생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880억을 끌어모으고 대통령 순방마다 따라다녔다. 수상함을 느낀 한겨레는 바로 특별취재팀을 만들어 조사에 들어갔다. 한 달 뒤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의 이름을 신문에 등장시켰다. 또 한겨레는 K스포츠 이사장을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대통령 측근 최순실이었다는 걸 밝혔다. 이 뉴스는 최순실이 동네 주민을 이사장에 앉힐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말한다.

국정 농단은 좋은 자리에서 이익을 독점하듯이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한다는 뜻이다. 최순실 게이트 시작은 2016년 7월 말 TV조선의 의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TV조선은 전두환의 일해재단처럼 미르재단 · K스포츠 재단이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한 달 뒤 한겨레는 두 재단(미르재단 · K스포츠 재단)에서 벌어진 비리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인물이 최순실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는 전에 등장했던 TV조선의 의혹에 다시 불을 붙여 서막을 열었다. TV조선과 한겨레 특종 이후 추가 취재 결과 재단 설립에 관여한 정도 대규모 국정농단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당시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입학처장이 정유라를 지목해 뽑으라고 했다"라는 폭로가 나오기도 하였으며 정유라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학점을 챙기고 학교 학칙을 바꾸는 등 여러 악행을 저질렀다. 또한, 최순실은 정유라의 지도교수인 이화여대 교수에게 폭언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지도교수를 바꿔버렸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PC를 입수하였다.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각종 국가 기밀문서가 들어있는 것과 최순실이 박근혜가 연설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문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 언론이 터지고 최순실은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태블릿에 최순실 셀카가 발견되어 최순실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졌다. 이외에도 최순실은 국가 안보에 관한 극비 문서를 받고 청탁받고 각종 인사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 청와대를 검문 검색받지 않으면서 제집 드나들듯 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의 권력을 상징하는 1001번을 거주지와 카페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국정농단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한결같이 이 사실을 거부하였다.

이때까지 국정농단과 비선 실세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사과 한 방에

비선 실세의 존재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보수 진영(조선일보)마저 대통령에게서 돌아섰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의혹을 밝히자며 앞장섰다. 또한 어떤 의원들은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였다. 비선 실세 사실에 분노한 대중들은 10월 29에 대통령 하야, 퇴진, 탄핵, 관계자 처벌 등을 외치기 시작하여 촛불 집회가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시작한 촛불 집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대국민 담화 발표를 했다.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검찰 수사 성실히 임할 각오를 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였다. 11월 12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도 촛불 집회를 이어갔다. 3차 촛불 집회는 6월항쟁 이후 최대 인파인 100만 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11월 20일에는 검찰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다시 한번 사죄하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임기 단축 포함 진퇴를 국회에 맡기고 박근혜는 국회 결정 일정 따라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여론은 이것을 국회에 공을 넘기는 식의 버티기로 받아들였다.

12월 3일에는 서울·대구·울산 등 전국 26곳 동시 집회되었다. 6차 집회는 역대 최대 인원 232만 명 참가로 사상 최초로 참가 인원 2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촛불 집회이다. 추가로 이날 전국 집회 현장서 7시에 1분간 소등을 하여 세월호 7시간 밝히라는 의미가 있는 소등행사가 있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사진: SBS 자료화면)

12월 9일, 국회에서 실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통령 직무가 모두 정지되었다. 12월 21일, 특검은 이날 현판식을 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탄핵 사유를 강하게 부인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은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정과 고위 공직 인사의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을 반박했다. 또 미르재단·K 스포츠 재단 운영은 국정 수행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특검에서 삼성 등 대기업과의 검은 거래와 헌법 가치를 유린한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은 속속 실체가 드러났다.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시한 김기춘과 조윤선은 구속당하고 2월 17일, 이재용도 구속당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성과 엄격함을 잃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최순실의 국정 개입,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12가지 탄핵 사유를 놓고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글 김민석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와 영향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11월 ~ 2017년 3월에 발생한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주변에 발생한 국정농단 논란, 즉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스캔들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 정윤회의 전처 최순실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다. 이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문형표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묵인, 방조,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권은 전국적인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고, 매주 대규모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된다.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9가지의 탄핵소추사유가 담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탄핵되었다.

문제의 시작

이 사건은 측근이 국정 자체를 좌지우지 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터진 측근 범죄와는 그 심각성이 다르다. 이전 정권까지 일어난 측근 범죄는 대개 권력형 비리였다.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위에 서서 연설문과 정관계 인사 문제, 국가 사업 수주처럼 중대한 문제를 자기 일당들과 마음대로 결정하며 국정을 우롱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의 행정부를 컨트롤하는 최상위 기관인 청와대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이전 대통령들의 측근 비리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충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온 이유는 이 사태는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오랜 기간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전 대통령들의 측근 비리의 경우 비리 주모자들의 존재는 비리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따라서 의회와 언론의 감시도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순실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겨졌으므로 의회, 언론 등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최순실의 권력은 대통령 이상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막강해졌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 일을 집권 4년차까지도 철저히 함구했고, 이에 저항하는 낌새를 보인 공직자나 이를 탐사하려는 언론은 철저히 탄압했다. 최순실의 실제 포지션은 영부인에 가까워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박근혜(좌)와 최순실(우)
(사진: 나무위키)

정무를 직무유기하고 최순실에게 국정을 일임했다는 점에서 최순실이 사실상 대통령이고 박근혜는 꼭두각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새로운 칭호

이 일을 통해 박근혜는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대통령. 민주공화국 제1의 원칙인 민주주의를 흔든 것은 민주공화제 자체를 부정하는 엄청난 국기문란이다. 쉽게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흔들린 것은 국가 최고법이자, 국가의 체제와 원칙을 정하는 법치주의의 상징인 헌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헌법 교과서에서도 이르기를, 국가 형태 및 국가의 기본 질서 등은 개헌으로도 바꿀 수 없음이 다수설이고, 대한민국은 기본 질서로 '만주주의'를 천명하여 헌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어버렸고, 박근혜 스스로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비리 따위가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라는 개념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삼권분립주의를 훼손했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세 영역으로 분리한 것인데, 이는 각각 영역끼리 서로를 견제하여 어느 한 영역에 권력이 쏠리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주권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 세 영역에 대해 각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하였다. 본인들과 엮였다는 이유로,

비리로 얼룩진 인사를 두둔하기 위해, 입법부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힘을 실었다. 그 외에도 박근혜 자신의 당내 세력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한손에는 행정부를, 한 손에는 입법부를 손에 쥐고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을 최순실 일당의 요구에 따르게끔 만들었다.

또한 행정부의 뿌리인 관료제를 편법과 위법으로 완전히 무시했다. 현대 행정학의 한 분야인 '인사행정론'에 의하면, 현 '정부관료제'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를 배격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정석이며, 이는 정치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객관적인 행정을 시행함을 뜻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최순실 및 비선라인을 통해 실적주의 관료제를 모두 무시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대통령 연설문 수정사건부터, 국가적 행사에 최씨의 의견이 담긴 오방낭 퍼포먼스를 한다던지, 대통령 의상을 비서실이 아닌 최순실에게 자문을 구한다던지 등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도 없다. 사소한 것부터 국가 중대사까지 모두 비선라인에게 자문을 구할 거면 세금으로 월급 주는 비서실은 왜 있고 각종 참모들은 뭐하러 두었나. 더구나 박근혜는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걸로 유명했는데, 행정 관료제의 수장으로서 관료들과의 소통 부재 행위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결국 비선에, 비선에 의한, 비선을 위한 주관적인 행정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도, 대의민주제를 뿌리째 부정하였다. 전술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국가 중대사를 논할 경우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국민들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다. 즉,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증언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최순실 및 비선라인들이 국가 중대사에 깊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개 개인이 국가를 제멋대로 주물렀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었다. 결국 국민 주권을 완전히 부정당한 셈이다. 대리인이면 대리인답게 위임된 권력을 잘 행사해야지 누가 그것을 비선에게 넘기라고 했나. 누가 표결조차 붙이지 않고, 최소한의 감사조차 받지 않으며, 그 자격조차 논의되지 않은 한낱 개인과 국가의 최고 수반이 쑥닥거려 내린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나.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로 뽑은 것은 박근혜지, 최순실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특성상 이런 사적인 관계는 민주주의(대의민주제)의 실현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탄핵의 영향

정치적으로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탄핵 정국 동안의 국정 마비와 코리아 패싱 논란도 있었지만, 2030 세대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촛불집회 (사진: YTN)

급격하게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았다. 반면 박근혜의 실정으로 쌓여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이는 보수정당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2021년 재보궐선거 이전까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내리 참패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한편,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계기로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50대 이하의 청장년층 사이의 세대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여준 일부 노인들의 막말과 비합리성, 공격성 등에 대한 반감으로 2030 세대에선 틀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비합리성이 사회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노년층의 과거 향수에 대한 극단적 반응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안 그런 노인들도 많았기에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청장년층과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촛불집회의 경험이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촛불집회는 대한항공 에밀리 조 전무의 갑질에 맞선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 갑질 교수에 저항하는 서울대생들의 촛불집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항의하는 소액 주주들의 촛불집회 등 사회 여러 곳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항공 집회 같은 경우 가이 포크스 가면도 활용되었다.

그나마 이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이라 하면 박근혜 퇴진운동과 더불어 반면교사로 작용되어 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대체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 관련 TV 프로도 이전과 다르게 시청률이 올라갔고, 정치에 대한 참여도나 투표율도 이전 대비 상승했다.

글 조하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진: 세계일보

박근혜 前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503번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 8개월간 수감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다.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자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지만, 육영수 여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터지며 교육자의 꿈을 접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영부인 대행을 하게된다. 1979년 10.26사건으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마저 서거하며 16년 만에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그리고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후 20여년 가까이 세간에서 잊혀졌지만, 제 15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하게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생활이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당시 운전면허 시험 정상화, 대체 휴일 제도 부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문화가 있는날 등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일을 했음에도 친인척 비리, 정계와 관련있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자살,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정부 불신 풍조와 음모론까지 결합되며 정치적으로 흉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등 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큰 몫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고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되었다.

이후 국정농단, 국정원 뇌물수수,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 벌금 180억 • 추징금 35억을 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503번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수감 직후부터 꾸준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말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부터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달 22일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는 전체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면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여러 추축들이 생겨나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론의 물음에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22년 신년 특사에서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24일,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할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전했다.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었음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으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2022년 신년 특별 사면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상황파악이 안돼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24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면 위원회 심의 •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도 해야 하니 결정 났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입장은 여태껏 일관되게 밝혀온 게 있긴 하다. 이게 당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단계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면 그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이었던 것에 대해선 '일반적 원칙을 이야기 한 것',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게 기존 입장 '이었음을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수사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둬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 수사로 가둬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만시지탄'이라 평가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사면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 교활한 술책'이라 말하기도 했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다 24일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란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꼬집으며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 장병을 격려하며 나눈 대화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하며 건강상태도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 대한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한다"고 했다. 대선후보와 정당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될지 매우 큰 관심을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24일 국정 농단 사건으로 5년 가까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아 사면된다는 소식이 전해진수, JTBC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JTBC는 온라인 패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고, 그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8.0%, '찬성한다'는 응답이 40.5%,'잘모르겠다'는 응답이 11.5%로 반대의견의 8%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12월 27일 1,000여 개의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8년 넘게 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함께 사면한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을 환영하는 것과 달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하는 것에서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가지 노림수를 보고, 정치적 묘수를 둔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묘수가 묘수로 쓰일지, 발목을 잡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많은 기사들과 영상을 찾아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건강상의 문제를 많이 고려해 내린 결정일 것이다 라는 추즉이 참 많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게 된 것은 국정농단으로 인한 것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해 국민들의 촛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 교도소에 있다고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으면서 교도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올해 1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꺼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좋지 못했던 분위기를 수습했었다. 그리고 덧붙인 이유가 "국민적 공감대가 전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5월달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재차 강조해왔다. 윤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이가 많으신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는 것이기에 잘 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시설과 탄핵 당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생각하고, 현재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이야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란 부분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던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국가지도자로서 용서를 구한적이 있는지, 용서를 구했다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외면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민에 대해 서운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나"라는 입장을 밝힌것처럼 박 수석은 27일 CBS라디오, TBS 라디오,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 설명했다. 즉, 특별사면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통령이 대표로 행사한 것이라는 것인데, 누가 언제 그런 결정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궁금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지만, 현재 국민적 공감대는 이번 특별사면에 우호적이지 않음을 JTBC에서 실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볼 수 있다.

대선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는 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정했다 생각하고, 대선 전까지는 정치화 시킨다던지 크게 이슈화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오는 31일 오전 0시에 사면되는 만큼 2022 1월과 2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진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대선후보들 중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비리와 탄핵과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글 정지원

월북과 22사단

2022년 1월 1일 '점프 귀순'으로 알려진 북한 이탈 주민이 북으로 월북을 했다. 월북자 A씨는 2021년 3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해 왔다. 그는 청소용역일을 했고,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월 50만원 이상 수급 중 이었으며 자산은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 알려진 내용을 보았을 때 몇달씩 임대료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으며 주변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A씨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살던 이웃은 '여기서 8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은 본 건 3~4번이 전부', '신정 전날 오전 7시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새것 같은 포대기와 매트리스 이불을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버리더라, 모두 너무 새것이라 이상했다. 우리가 쓰면 안 되냐고 말해 볼까 하다가 이전부터 계속 교류가 없었기에 말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당국과 연락을 했지만, 30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2022년 1월 1일 재입북했다. 그와 같이 하나원에서 생활한 동기였던 탈북민은, 그가 북에서 기계체조와 복싱을 했었는데, "북에서 복싱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얘기도 동기들에게 종종 했다."고 했다. 또한 "보통 탈북민들은 하나원을 나오면 동기를 찾고 정착관련기관을 찾는데, 그는 전혀 그런 접촉이나 활동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A씨가 탈북민 단체와 하나원 동기 등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A씨를 담당했던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차례 A씨에게서 월북 징후가 보인다고 서울 경찰청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월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의 관리 인력의 부족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 귀순한 뒤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려움없이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2개월 전 병을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잠적했다.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철책을 넘어 북으로 갔다. 이후 북한군 3명이 맞이하러 내려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북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닌가 하는 가설이 생겨났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재입북을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20년 10월 6일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근 10년간 총 55명이 월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총 55명 중 북에 체류한 것은 39명이고, 나머지 25명은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월북자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29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이유로는 남한 정착 과정의 어려움, 북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월북자 A씨는 2020년 11월 '점프 귀순'때 왔던 길로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1년여 전,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부대 철책을 통해 귀순하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장소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일 18시 40분에 GOP 철책을 넘을 당시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으나 당시 CCTV병이 인지 하지 못했으며,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정상 작동하여 초동조치 부대가 출동했지만, 철책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이후 21시 20분에 DMZ 내에 신원미상의 인물이 있는 것을 감지 장비로 확인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추적했으나 실패했고, 22시 40분 MDL을 넘어가 월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나 합참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가 있어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만 보았을 때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철책을 넘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고 3시간 뒤에나 인지한 점.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철책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철수해 초동조치에 실패한 점으로 인해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부대원들은 부실한 초동조치와 CCTV 근무 태만에 대해 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38도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휴전하고

조선일보 자료화면

있는 국가이다. 안보가 매우 중요한 현재 상황에서 남한의 최전방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든, 북측군인이든, 스파이든 내려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한의 군대 내에서 자다가 발견되거나, 군대 내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남한의 최전방을 지키는 군대에서 보여주기에 부적잡한 모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경계근무가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발전된 방법은 없을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최전방에서 국가를 지키는 부대인 22사단이 맡은 경계 지역이 너무 넓은 것은 아닌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부대 내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사단은 북측으로 넘어가는 월북과 북에서 내려오는 귀순 뿐만아니라, 총기난사 3건, 월북 및 귀순 9건, 투신자살 1건, 중대장 • 병사 폭행사건 2건, 성폭행사건 1건 등 자살사고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대이다. 22사단에서 전역한 전역자들 중 다수는 22사단 자체가 인력이 부족해 병사 업무가 가중되어 피로도가 굉자이 높은 사단이라 말한다. 전역자들과 현재 군대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방안이 생겨, 군인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최전방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CCTV 역시 감시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를 확대하는 통에 사용자가 피로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고, 감시병 1인이 감시해야 할 화면도 너무 많고, CCTV 기능을 알려줄 인수인계도 부족하며, 부대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체계 등을 이야기 하며 경보장치 자체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22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어떤 경계시스템으로 군대의 운영 이뤄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대로 된 부대라면 교육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고, 병사가 1명이 아닌 최소 4명이며 거기에 간부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원칙대로라면 한 상황실에서만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전부와도 카메라를 공유하기에 감시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한다. 즉 22사단 한 상황실에서 월북자의 모습을 놓쳤더라도 다른 상황실에서는 철책을 넘는 월북자를 실시간으로 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한 것을 확인한 후, 북한 측에 1월 2일 오전과 오후 군 통신선을 통해 두 차례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 측이 통지문을 수신했다고만 확인해 줬을 뿐, 우리 측의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월북자가 DMZ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월북자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월북자 A씨가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확실 하지 않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반듯이 누군가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책임을 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22사단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한 귀순과 월북이 발생하지 않도록 22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2사단은 항상 군내에서 문제만 생기면 지휘관들이 줄줄이 해임되어 별들의 무덤이란 별명도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글 정지원

Constitutional Court

대한민국의 헌법

국가는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으로 인해 형성되는 하나의 사회이다. 이 사회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운영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국가를 운영해 나아가며 개인의 요구와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기초가 되는 국가통치체제와 사회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기도 하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국가의 창설과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통합과 조직 수권의 규범이다. 또한, 이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이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며 무정부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근대 시민 사회의 형성 이후, 헌법은 사회성을 나타내는 계약의 산물로 간주되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20세기에 이르러서 복지 국가 헌법으로 발전하며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뿐만 아닌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강준형의 경제산책블로그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날을 '제헌절'로 칭하여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문 헌법'으로서 형식을 갖추어 법전에 기록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총 9차례의 개헌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제헌 헌법의 제정 이후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 세력의 집권 연장이나 군사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장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볼 수 없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1987년 6월 10일, 민주 항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마지막 개헌인 제9차 개정 헌법, '87'년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 '87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헌법 재판소의 도입을 실현시킨 개헌이기도 하다.

헌법은 특징적인 색깔이 존재한다. 이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개헌이 일어나기에 다른 규범보다 정치성이 짙다. 또한, 헌법은 일정한 가치나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근대 헌법은 시민적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려 하였고, 현대에 들어서서는 사회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정된 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었기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에는 각 국가기관이 존재하며 이는 특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이 국가기관과 권한을 헌법이 부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입법권을 국회에, 행정권을 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기에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헌법은 각 국가마다 다르며 각 국가에 따른 고유한 헌법이 존재한다. 미국의 헌법 제1조는 '이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 의회에 귀속한다. 합중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이다. 이는 당시 미국이 입법부만 존재하고 행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다. 그렇기에 헌법 제 1조를 통해 입법권과 헌법에 대한 권력을 의회에 부여하며

권력을 내세웠다. 또한, 일본의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이다. 이도 미국과 같이 권력과 대표성을 천황에게 부여함으로서 상징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을 벗어나 국가를 민주적 공화국으로 세웠다는 것과 국가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민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대표자가 선출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운영되어 나아간다는 것이다.

헌법은 헌법만의 기본원리를 법안에 담고있는데, 이는 모든 헌법의 근간이 되는 지도적 틀이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으며 헌법 전문과 본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국제 평화주의 그리고 복지 국가와 문화 국가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세웠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모두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 권력은 주권을 지닌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가 실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은 참정권 부여와 언론,출판, 집회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복수 정당제와 선거 제도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이루는 자유 민주주의와 상당히 닮아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권력의 원천을 국민에게 기초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닮아있다. 또한, 헌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권력의 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국민을 기초에 두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지 국가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되었고, 국제 평화주의와 평화 통일의 지향을 통하여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였다.

대한민국의 개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길고 길었던 일제의 통치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모든이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쳤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빼앗긴 대한민국은 무려 36년만의 자유인 광복을 발판삼아 대한민국은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1948년 5월 10일,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운영 및 국민의 권리를 표하는 제반 법률의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인 제헌국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총 198명의 의원들이 당선되었다.

이후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제헌 헌법을 1948년 7월 17일에 제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제헌

사진: EBS

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고, 이를 따라 대통령 이승만을 필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 헌법 이후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총 9차 개정까지 이뤄졌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력의 기본구조,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등 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을 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고,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도 헌법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다.

첫번째 개헌은 1952년 7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행해진 것이다. 그렇기에 대통령 직선제가 담긴 정부안과 의원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췌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 기립투표로 강제 의결이 되며 이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8월 재선에 성공하였다.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부르며 1954년 11월 29일에 행해졌다. 이는 1차 개헌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기에 대통령 중임과 3선의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였다.

제 3차 개헌은 1960년 6월 15일에 실시되었으며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게 된다. 이는 '의원내각제 개헌'으로서 사상 최초 합법적 절차에 따른 개헌이다. 또한, 5차 개헌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개헌이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을 2기로 국한하는 5차 헌법 개정안을 최초로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확정한 헌법개정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1969년에 6차 개헌, 즉 '3선 개헌'을 실시하였다. 이는 3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재임을 3선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헌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시작되었다. 또한, 7차 개헌은 '유신헌법'이라고도 불리며 1972년 12월 27일에 제정되었다.

이는 비상조치로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해 제정된 개정안이다. 대통령의 1인 장기 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고 대통령 간접선거 선출과 임기 6년, 중임과 연임 제한 철폐를 위함이며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하며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2월에 4선에 성공하며 1978년 7월 5선까지 성공했다.

이후 1980년 10월 27일 실시된 8차 개헌에서는 1979년의 10·26사태와 12·12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전두환이 국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제정하며 국민투표를 진행해 이를 확정하였다. 또한, 행복추구권, 무죄추정 원칙, 환경권 신설을 진행하였고, 대통령을 간선제와 7년 단임 임기로 개정하였다. 마지막 제 9차 개헌은 1987년 10월 29일 진행되었으며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제를 부활시켰고,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며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이 진행되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도 지속되었는데, 지난 2021년 10월 20일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세종시에서 열렸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5년 6월 27일에 있었던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 자치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치제도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명문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제도 보완을 위한 ;명문조항'의 신설과 지역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상원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위와 같이 총 8번에 걸친 이전의 개헌은 정치인들과 헌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또한, 이제껏 개헌은 대부분 대통령과 그 정부의 권력에 의하여 사유화되었다. '발췌개헌'인 1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반석이었으며 2차 개헌도 마찬가지로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6차와 7차 개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연임이 가능케 하기 위한 개헌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헌은 정부의 뜻대로 국민 투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정작 권리를 누려야 할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글 권사랑

6월 민주항쟁과 민주화 선언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전두환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이 점점 고조되어가던 당시, 학생 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가 수배되고, 사건 관련 수배자 였던 박종운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후배였던 박종철을 불법으로 체포하게 된다. 박종철은 수배자 박종운의 행방을 자백하지 않아서 전류를 몸에 흘려보내는 고문,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쥐어박는 고문 등을 당하게 된다. 고문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자 박종철은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하게 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박종철이 '책상을 탁! 치자 억! 하고 죽었다'고 보도하지만 시체부검 결과 물고문으로 사망한 것이 밝혀져, 이 사건을 수사했던 주요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렸고, 이어서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열렸다. 이후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전에 계속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일어났었는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그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자, 전두환은 정권 유지에 불안감을 느껴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4.13 호헌조치를 실행한다. 전두환은 다음해에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사진: 연합뉴스

선언한다. 이 선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는 더 불타올랐다. 국민들은 개헌을 위해 소리쳤다.

6월 9일, 호헌조치 철폐를 위해 시위하던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게된다. 거듭되는 학생의 죽음으로 국민들은 더욱 더 분노하게 되었으며, 이 상황에서도 권력의 2인자 였던 노태우를 차기 대선 후보로 추대하자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 호헌조치,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을 토대로, 6월 10일 그들의 민주화 의지가 전국구에 두루 퍼지게 된다. 6.10 민주항쟁의 시작이었다. 시민들은 '독재타도, 호헌철폐'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에서 주최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가 일어나게 된다. 6월 10일을 시작으로 6월 한달동안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 10일, 대회가 끝나고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던 시위농성자들은 1주일을 쉬지 않고 시위를 진행했으며,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갔다. 계속된 시위로 정부와 여당은 시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시위농성이 일어났던 명동성당은 평소와 같이 미사가 진행되는 등 평화로운 모습이었으나, 그 속에서도 긴장감은 늦출 수 없었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시위를 하는 국민들과 경찰들이 서로 자제하는 모습은 볼 수 있었다. 농성자들은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으며, 경찰들은 최루탄 발사도 멈췄다. 이렇게 반정부 민주화 시위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긴장감 가득한 국민과 정부 사이의 냉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시위를 진행하던 사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행, 구속된 사람들이 전원 석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시위도 다소 격렬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내에서 대학생 2천여 명이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역시 경찰들은 최루탄 발사를 자제했고, 시위자들도 돌과 화염병은 던지지 않았으므로 시위는 보다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시위농성자들은 농성을 철거해달라는 성당의 말에 따라 15일, 농성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전국적인 시위는 중단되지 않았다.

29일, 민주화 운동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아냈다. 이후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등 국민들과 야당이 원하던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을 가진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의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 이양.

둘째,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셋째,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넷째,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다섯째, 자유언론의 창달.

여섯째,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여덟째,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6.29 민주화 선언을 이후로 직선제 개헌이 되었으므로 야당은 저항할 필요가 없어져 물러나고, 시위를 진행하던 학생들은 직선제 개헌에 대해 완전히 만족 하지만은 않았지만 이미 직선제 개헌으로 많은 대중의 시위 열기가 식었으므로 더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6월 한 달간의 뜨거웠던 민주화 운동의 열기는 차기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의 민주화 선언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6월 민주항쟁으로 군사적 독재 정치가 종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정권의 출범으로 군사적 독재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이 자리잡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6월 민주항쟁과 민주화 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6월 민주항쟁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모든 계층의 시민 참여와 학생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항일 운동 이라는 것이다. 항쟁의 시작은 대학생들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 시민, 빈민, 농민 등이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학생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6월 민주항쟁은 모든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전반적인 민주화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6월 민주항쟁은 어떤 의미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혔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우리는 전세계의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6·10 국민 대회 선언문 -

국가의 무력 진압과 고문으로 인한 학생들의 죽음, 전국을 뒤덮은 최루탄 가스, 이 것들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군사 정권에 의한 독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어찌보면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인 것인가. 6.29 민주화 선언으로 결국 간선제가 직선제로 개헌이 되고 조금이나마 민주화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죽음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자신의 정권을 지키겠다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참히 죽여 버린다면, 비록 그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면에서든지 인정될 수 없는 행위다.

글 오주희

6월 민주항쟁의 지역별 진행과정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안되어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여 대통령 간접 선고 조항을 유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원하던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직선제의 복구를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이뤄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선언을 계기로 제도권 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직선제 개헌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권위주의 체제는 무너졌고 서구 수준의 자유민주주의가 쟁취되었다.

6월 9일,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각 대화 교정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 당시 학생들은 '전두환-노태우 화형식'을 끝낸 후 교문 앞으로 진출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에게 경찰들은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이 연세대생 이한열의 후두부에 직격하였다. 결국에 이한열은 숨지게 되었다.

6월 10일에는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시위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것은 박종철, 이한열의 사망과 같은 사건이 그들을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많은 수를 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때문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 별 진행과정

부산

6월 13일, 부산에서는 전방입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부산수산대, 경성대 학생 천여 명이 부산역에 한꺼번에 나와 "독재타도", "호언 철폐"를 외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지나가던 시민들과 대합실에 있던 시민들이 합세해 1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때 시민들은 인근 상점에서 쭈쭈바를 수십 개씩 사서 시위대 위로 던지며 응원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으로 흩어져 남포동과 서면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6월 16일, 부산에서는 부산대생 5천여 명 등 9개 대학생 1만여 명이 비상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시내에서 연합 시위를 벌였다. 대청동 사거리에서 시위대 5천여 명은 총무동 시위대와 합세하면서 남포동 거리를 완전히 뒤덮여버렸고, 시위대는 금방 1만 여명을 넘어섰다. 대중집회를 마친 남포동 시위대는 인근 시청 옆 MBC 방송국으로 향했다. 경찰은 시청 앞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아 차단했다. 경찰 저지선까지 이동한 시위대는 연좌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평화적 연좌시위임에도 몇 차례 경고방송과 함께 최루탄을 난사하면서 진격했다. 최루탄을 난사하는 경찰은 집요하게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시위대 해산 작전을 펼치면서 시위대는 고립되기 시작했다. 시위대 중 일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톨릭센터와 접촉했고, 심각성을 인지한 가톨릭센터가 비상시에 센터 안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해 피신하고, 가톨릭센터를 항쟁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6월 18일, 부산에서는 2만여 명의 시위대가 가톨릭센터를 거점으로 집결하여 대청동, 총무동, 남포동 일대를 장악하고 출동한 경찰 병력을 향해 인근 공사장의 철근, 벽돌 등으로 격렬히 저항했다. 이들은 이한열과 독재타도/호언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범일동 및 좌천동고가를 향해 전진했다. 그러나 최루탄이 무차별 난사되는 중에 회사원 이태춘씨가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다리 밑으로 떨어져 인근 봉생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소식에 더욱 분노한 시민들은 저지선을 뚫어 KBS부산방송총국을 습격하여

집기 일부를 파손했으며 밤 사이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렸다. 이날 서면 ~ 범내골 일대에는 30만 명이 운집해 6월 항쟁 최대의 시위가 일어났다. 6월 19일, 부산에서는 10개 대학 및 3개의 전문대 학생들이 시내로 몰려나와 경찰 기동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진압장비를 탈취했으며, 초량파출소, 남포1, 2, 3파출소, 보수1파출소, 부산진파출소 등에 방화하고 집기를 파손했다. 6월 21일, 부산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806명이 연행되었다. 이 시기에 부상자가 속출해 부산대 의치대, 동아대 의대, 고신대 의대 4학년생을 중심으로 진료반을 구성했다. 제약사에서는 약품을 트럭 채로 실어 날라 주기도 했다.

대전

6월 15일, 충남 대전에서는 충남대, 목원대, 한남대, 배재대, 대전대 등에서 학생들이 일제히 교문 봉쇄선 돌파를 시도했고, 병력 대부분을 서울에 차출당한 충남 경찰은 모든 학교에서 방어선이 돌파당했다. 쏟아져나온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전 도심을 가득 메웠고, 이에 대전치안당국이 타협안을 제시해 대전역까지의 가두시위를 보장하고 잔입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6월 19일 대전에서는 과격 시위대가 탈취한 버스가 대전역 광장에서 휴식 중이던 충남제2기동대 전경 대열을 덮쳐 전경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당했다.

경남 진주시

6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도 시위대에 의해 파출소 4곳이 공격받아 불탔고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가 공격받았으며 남해고속도로를 점거했다.

경남 마산

6월 17일, 전날에 이어 시위를 이어가던 진주 경상대 학생들이 남해고속도로로 재차 진입, 도로를 점거하고 LP 운반 차량 2대를 탈취하여 폭파 협박을 하며 진주시내 진입을 시도해 정촌파출소를 불태웠다. 이 초유의 사태에 경찰특공대까지 투입. 시위대를 겨우 해산시키고 운반 차량을 재탈환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시위대가 다시 뭉쳐 경전선 철도를 점거하는 바람에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다. 10일에 이은 대규모 시위가 이어져서 산호1파출소, 의창군청, 노동부 마산사무소가 공격받았고 방법초소가 전소되었다.

강원도 춘천시

6월 18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강원대와 한림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및 시민 1만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시내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며 주요 관공서와 파출소, 방송국 등을 습격했고, 시위가 이어지던 19일 새벽 1시경에는 강원도청을 점거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몇몇 전경 부대는 접전 중에 진압장비 다수를 빼앗겨 시위대에게 불태워졌고, 경찰 차량 몇 대도 전소되었다.

충북 청주시

6월 19일, 충북 청주시에서는 충북대생 200여 명으로 시작된 시위가, 최루탄 파편에 유아가 맞아 다치는 등 많은 일이 벌어져 총 1만 명이 넘는 시위대로 크게 불어났다. 이 기세를 타고 청주시청, 민정당 충북당사, 사직경찰서, KBS 청주총국, 충청일보사 등에 화염병 및 투석 공격을 감행했다.

6월 20일, 19일에 이어 청주시에서는 연이틀 연속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21일에도 다시 시위에 나서서 3일 연속으로 시내로 나아갔고 19일 공격한 KBS 및 충청일보사를 다시 공격했으며 이후 전경들에 밀려 퇴각하는 와중에도 사창파출소를 공격해 불태웠다.

충북 충주시

6월 19일, 충북 충주시에서는 건대생 200여명을 포함한 시위대 1천여 명이 가두 시위에 나서며 KBS 충주방송국과 민정당사, 신민당사, 전신국 , 용암파출소 등을 공격했다. 충북 경찰 역시 다수 경력이 서울로 차출되고 남은 경력 중 다수가 청주에 결집한 상황이어서 고작 1천여 명에게 속수무책으로 털렸다. 결국 옆동네인 제천에서 급히 경력을 지원받아 시위대를 해산했다.

제주도

6월 23일, 제주도에서는 연 3일째 가두시위를 벌인 제주대학교 학생 7백여명이 제주시내 도심지에서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하는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동반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대생들은 중앙로 지하상가 공사장에 세워져 있던 도로포장용 중기 1대를 밀고 나오고 제주시청 소속 제주 7가1050호 지프를 공격해 전복시키기도 했다. 이후 11시30분께 지난 22일부터 학생 1백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중앙성당으로 합류했다가, 24일 새벽 학교와 성당측의 주선으로 연행학생들이 모두 풀려나오자 농성을 풀고 귀가했다.

경기도 안양시

6월 26일,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경찰관사와 안양파출소가 공격받아 불에 탔고, 민정당 안양지구당도 마찬가지로 전소되었다. 노동부 안양출장소도 사측 편만 든다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시위에 담겨지면서 같이 공격받아 불타올랐다. 그리고 안양 경찰은 패퇴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노력에 전두환 정권은 타협을 택했다. 먼저 민정당은 6월 21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 고민하였고, 다음 날인 22일에 전두환은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김영삼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틀에 걸쳐 협상을 조율한 끝에 전두환과 김영삼의 영수회의가 성사되었지만, 김영삼이 요구한 직선제, 선택적 국민투표, 구속자 석방 등을 전두환이 거부해서 회담이 결렬되었다.

드디어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직선제 수용 선언(6.29 선언)으로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이른 것이다. 이 선언으로 노태우는 일약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였다. 6월 항쟁의 대미는 7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이한열의 장례식으로 끝났는데, 처음에는 연세대 교정에서 군중 10만명으로 시작해 신촌 네거리 노제에서 30만, 시청 앞에선 100만여 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 장례식 참가 인원수는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집회 중 최고였다. 이 기록은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와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190만)/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232만)로 인해 깨졌다. 그러나 이한열의 장례식 당시 100만여 명은 정부 추산(=순간 최대 인원. 연세대에서 명동까지 꽉 채웠던 인파가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까지 꽉 채운 인원보다 적었을 리가). 정부 추산 43만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의 날 당시 경찰측 정부 추산이 시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적게 잡히고 있었던 것과, 232만명은 전국적인 참가 인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운구 행렬 이후 서울시청 광장에 남은 백만여 명의 군중은 연좌집회를 열었고 '전두환 퇴진', '청와대 진격'을 외치며 6.29 선언에 주저앉지 말고 전두환의 완전 퇴진을 위해 전민항쟁을 계속하자고 했다. 그러나 장례위원회도, 국본 지도부도, 서대협도 백만 인파가 모인 것을 예측하지 못한 까닭에 군중들은 광화문 4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경찰의 다연발 최루탄 난사로 군중들이 흩어져 6월 항쟁은 막을 내렸다. 이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역사상 9번째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직선제를 담고 있는 이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면서 제6공화국으로 개헌된다.

글 조하준

ECONOMICS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이다. 50년 전만 해도 산업 인프라, 자본, 기술, 경험 하나 없는 저개발 농업국에 불과한 작은 나라가 고작 반세기만에 철강, 정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진 공업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7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을 겪은 직후, 당시 세계 최악의 빈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6.25 한국전쟁 UN군 사령관이었던 멕아더 장군은 참혹한 우리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회복되려면

박정희 정부 경제적 성장의 정치적 배경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발언하였고, 종군기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 타임지 기자 또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1960년대 경제 수준은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하위권이었으며, 필리핀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였다. 당시 필리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60.2달러였고, 우리나라는 91.6달러였다. 1인당 GDP 수치만으로 알 수 있듯이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세 배 정도 잘살았다. 이렇듯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현재에는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필리핀보다 10배가량 높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순위 10위까지 올랐으며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못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배우고자하는 의지 또한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성장한 이유에는 미국의 원조, 물자 지원의 도움도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에 도모한 경제성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당시 정권을 잡고있던 시기 뿐만 아니라 그 후 몇 십년간, 현재까지도 경제가 성장하고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진 출처: 김현승 일러스트레이터

국가가 시장에 장기적 전략으로 개입하는 국가주도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전략산업'을 결정하고 국내외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이 분야에 집중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국가 방식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대개 후발 내지는 후후발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

박 대통령 정권 시기에 제1차, 2차,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1962년에서 1966년까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는데, 주요 목표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시켰고,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켰다. 또한 경제정책의 중심을 수출 제1주의로 전환하고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였다. 1963년부터 섬유, 합판, 철강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1962년 548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1963년에 8680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잡아야하는 기회라 판단하였고 한일 국교정상화 또한 서둘러 진행하였다. 한일협정 뿐만 아니라 월남전 파병을 통해서도 외화를 벌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이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83달러에서 126달러로 증가되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단행되었다. 주요 목표는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10억 달러의 수출 달성(1970),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된 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건설 사업 추진은 기차로 12시간, 기존 도로로는 15시간이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을 4시간 30분대로 단축시키며 막강한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철도 위주였던 수송 구조가 도로 위주로 바뀌면서 신속·대량화로 물류수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유통 부문 대변혁이었다. 해상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던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했고, 곧 산업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경부축을 따라 자동차, 제철, 정유 등 산업단지들이 크게 증가하며 생산 활동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고 도시는 더욱 성장했다. 서울 - 부산간 고속버스 노선이 개통되고 경부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지방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국은 일일생활권이 되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는 경제

사진 : 월간 중앙

성장을 가속화시켰으며 현재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뿐 아니라 새마을 운동도 실시되었다. 경제성장률이 1972년~1976년과 1977년~1985년 연평균 각각 10.2%와 6.5%로 실시된 시기에 매우 높았다. 농촌의 소득과 저축증대는 농촌지역의 자본형성과 고용효과를 가져왔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공산품에 대한 유효수요증대로 이어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2년에서 1976까지 이어졌다.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두었다. 이 시기에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이외에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양성하여 국가의 경제부흥에 힘쓰도록 하였다. 기업이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방위, 국민교육, 도로·항만 시설 등 국가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이용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박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79년 9월까지 개최했던 월례경제동향보고회의나 1979년 9월까지 147회 개최했던 수출진흥학대회의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에 잘 경청하고 기업인들과 협력하였다.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경쟁 촉진적 국정 운영에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이 더해지면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덕분에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공업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학자들이 박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는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강한 지도자였으며 기업을 일으켜 국부를 증진시킨 훌륭한 지도자이다"라고 평가했고,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은 중국 경제개발의 훌륭한 모델이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외국에 돌아다녀 보니 외국 지도자들이 온통 박정희 얘기뿐이더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전략산업'을 결정하고 국내외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이 분야에 집중 배분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발전국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행정적 효율성이 우선시되어 민주화는 무시되기 쉽다.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에게 분배없는 '성장 제일주의, 개발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고있지만, 대한민국이 단기간 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성립하고 억압적 정치환경 조성 등 독재정치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는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폐허였던 우리나라가 기업가를 양성하여 국가개발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GDP)에 따른 세계 경제 순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와 국민, 성장과 분배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 김하늘

성장 vs.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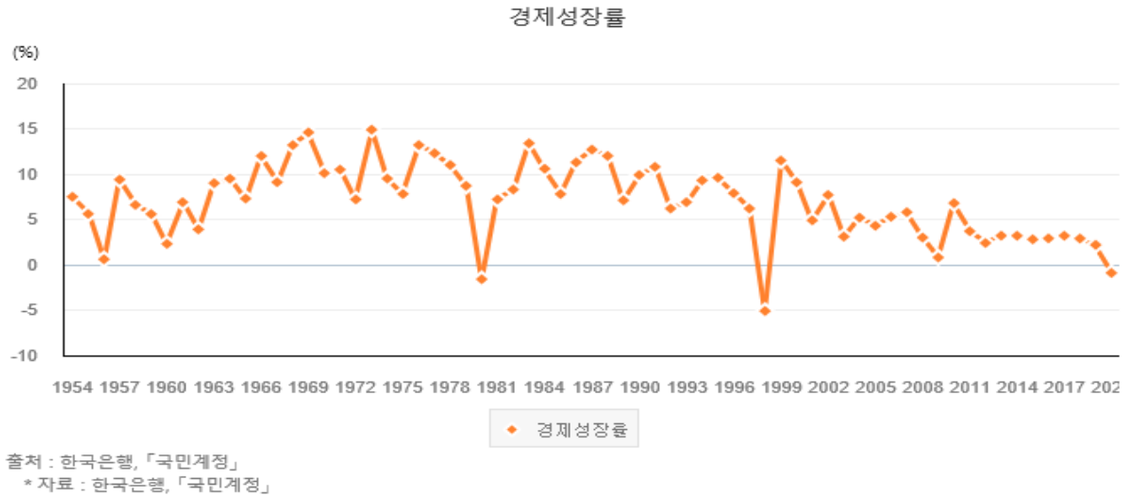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항에 이렇게 적혀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나와있듯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평화와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배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력을 가지려면 국가 성장도 필요하고, 안전과 평화를 차별없이 제공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분배도 해야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 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였는가? 균형잡힌 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평화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성장과 분배의 정의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어학사전에 '국가성장'을 검색해보면 '국가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는 일.'이라 나온다. 고대사회에서는 영토 성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현대에는 문화, 교육, 경제의 지표를 근거로 국가의 규모나 세력을 측정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가성장은 경제성장과 같이 봐도 무방하다. 경제성장은 말그대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며 국내총생산량(GDP)의 증대를 의미한다.

분배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이 생산물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서 나누는 일.'이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느 기업이 LCD TV를 1대 생산하여 5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판매대금 500만원은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임금, 자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이자, 토지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지대로, 경영능력을 제공한 기업가에게는 이윤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를 분배라 한다.

6.25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이승만 정권 시기에 미국 원조가 감소될 때부터 노무현 정권 시기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급성장을 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1975년부터 2000년대까지 5%이상 14%이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가장 경제성장이 크게 이루어졌으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은 14.9%였다. 또한 1977년에 1인당 GDP가 1천달러가 돌파하고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였다. 2차 오일쇼크, IMF 구제금융 사건이 발생한 1980년, 1997년에는 -1.6%, -5.1%로 하락했지만 곧 다음 년도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세계성장률을 훨씬 뛰어넘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희망없는 나라로 바라보았지만, 역사상 유래없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우리는 이 시기를 '성장제일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배보다는 국가성장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보릿고개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성장을 해야만 했었다. 그렇기에 정부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펼쳤다. 국민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여 참전하고, 독일로 간부와 간호사로 파견을 가기도 하였다. 강제성이 없다고



자료 : 한국은행

할 수는 없지만 이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의식주 해결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오락 등을 풍족하고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제일주의의식은 양극화 현상을 심각하게 초래하였다. 양극화란,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하며 계층 구조 모양으로 치면 가운데가 오목한 모래시계형으로 변하는 것이다. 양극화는 흔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최대의 난제로 여겨진다고 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는다. 또한 대한민국은 높은 경제상황에 비해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OECD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영역, 삶의 만족도 지수 모두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양극화가 이 비극의 원인에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기본적인 소득의 양극화 격차는 물론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시민들의 삶의 전 영역에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고 심화되어 가고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동산을 매개로 한 자산 소득에서의 불평등은 주거 지역의 양분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의 서열화와 지방대 차별 풍토 속에서 대학 입학률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정보의 양극화 등 다차원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문화적 맥락으로도 이어지게 되며 문화적 차별을 야기하는 동시에 분배 부정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대물림되고, 보이지 않는 부의 계급 간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성공의 열망은 희미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의 양극화 현상은 한편으로 절망계급들의 사회적 열패감과 좌절감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심도 강화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로 인하여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지기도 한다. 공산주의란 인민의 각성과 사회 통제를 전제로, '생산수단의 공유' 및 '인간 평등에 반하는 계급과 부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상의 이념이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 자본재의 공유에 있다. 원론적인 공산주의에서는 모두가 1/n으로 공평히 나눠 갖지 않는다. 일한 양에 비례해서 차별적인 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핵심에 따라 모두가 이익을 최소한 필요한 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사진 : 사례뉴스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은 모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경제적 양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적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공산주의는 분배는 완벽하게 해내지만, 성장은 미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본주의국가로 전환하였다.

공산주의와 반대인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상이다.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국가권력이 물권으로 인정하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상의 사회에서는 성장은 빨리 이룰 수 있지만 분배는 미흡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로는 미국, 일본, 영국, 대한민국 등 선진국이 주를 이루고, 이 국가들은 대부분 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렇듯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양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에 혁신성장과 분배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하여 모든 계층이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경제성장 즉 친분배적 성장을 의미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성장이 우선인지, 분배가 우선인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분배가 소홀해지고, 분배에 집중하다 보면 성장이 결여된다. 그러므로 성장과 분배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이 정치인의 몫인 것 같다. 대한민국 미래에 모든 국민이 생명과 안전과 평화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함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길 소망한다.

글 김하늘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즉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는 2006년 2월 3일 한미 양국이 출범을 공식 선언했으며,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을 결정한 무역 협정이다. 여기서 자유 무역 협정이란 둘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 및 수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 자유 무역 연합, 미국과 FTA협약을 맺었으며,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인도, 콜롬비아 등의 나라들과도 FTA를 체결했다.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같이 협상 체결을 준비중인 나라들도 있고, 중국과 같이 추진을 준비중인 나라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활발히 FTA를 체결하고 있고,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 FTA 발효국가
(사진 : 강상혁관세사 블로그)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1989년에 시작되었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인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 에서 한국과의 FTA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후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커져갔고, 200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협상이 선언된 이후로 총 8차에 거듭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 후로 타결된 협상문의 원본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미 FTA의 주요 내용은 수출.수입에 대한 제한, 농업 및 섬유, 의약품, 관세, 전자 상거래 등,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제약이 많이 사라졌다. 그런 반면에 양국의 의견을 조율 해야 했기에 당연히 제한되는 특정 부분이 있을 수도,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후로 추가협상 및 재협상이 몇차례 일어났다. 2010년 12월 5일,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최대 수혜 항목인 자동차 부품건에 관련한 논란 및 여러 비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 결과적으로 협상내용면에서 대한민국측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특히 미국측이 요구해오던 자동차 부분이 대부분 수용됐다. 타결된 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한국차에 대한 관세 철폐 이후 한국차의 판매량이 급증할 경우 미국측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는 25,000대 이상 판매되는 차량만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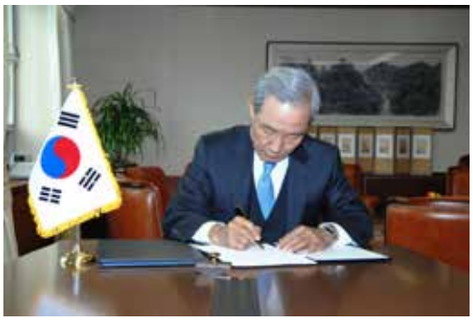


사진 : 한미 FTA 사진동향

협상에 대한 의혹도 몇 있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훈련 등과 연관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언론 보도로 이러한 논란이 더 붉어졌다.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 라고 한 언론이 보도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기사에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점을 하나 빼거나 고치면 그건 수정이다. 그런일은 없을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후 말을 바꿔서 재협상을 진행했으므로 이 행동에 대한 의혹도 붉어졌다. 김종훈이 국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면서 의혹은 좀 잠잠해지는가 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것"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로써 한미 FTA 재협상은 잘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자유 무역 협정이 그랬듯이 한미 자유 무역 협정도 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한미 FTA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확연히 갈려서 두 집단의 갈등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논란이었다. 한미 FTA가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했다. 한-미 FTA 비준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 유시민은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제가 에둘러 이야기한다" 라고 입장 바꿔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가 딱 잘라 나눠진 것은 한미 FTA의 강점과 약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봤다.

사진 : 경향신문

한미 FTA 반대측은 자유 무역 협정에 반대하기 위해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위를 진행한 이들은 주로 농축산업 노동자들 이었다. 그들은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강도적 개방 압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고 목소리 높이며 시위했다. 또 미국의 계속되는 쌀 시장 개방 요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추진되는 협상도 총력을 다 해 막아내겠다고 결의했다. 농축산업 노동자들이 이렇게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는 확실히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이 진행되면 그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농축산물을 싸게 구입하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외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관세의 문제.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서 미국에서의 관세를 철폐하는것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그러므로 한미 FTA를 통해 당장 실질적 이득을 가져갈 주체는 미국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축약하면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장치이다. 그것은 시민의 공공복리에 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이 누려온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 라고 한다.

한미 FTA는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왜 한미 FTA에 찬성하는가? 먼저, 한국이 무역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입장에서 한미 FTA는 당장의 우리 경제가 발전될 길이다. 수출이 활성화 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게 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것이다. 또한 우리와 미국이 동맹인 상태에서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면 그 관계도 더욱 더 개선될 것이다.

위와 같이 반대측의 의견과 찬성측의 의견을 다 듣고보면 모두 일리있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미 FTA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에 반대할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찬성할 수도 있다. 확실히 두 의견에 대한 강점과 약점은 모두 존재한다. 그렇기에 한미 FTA의 찬성과 반대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FTA를 맺은 후 다른 나라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중국,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맺기를 원했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던 중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중국은 저가 정책으로 미국에 자신들의 물품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도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며, 결국 수출 악화를 불러 일으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미 FTA가 중국에 어느정도의 악영향을 준 것이다. 일본은 먼저 2010년에 대한민국과 공식적으로는 FTA를 협상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농산물 개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 협상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농산물 개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은 또다시 우리나라에게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은 한미 FTA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그들의 방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확실히 한미 FTA로 인해 그들의 경쟁력은 많이 악화되었다. 농산물 측면에서는 한미 FTA가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도리어 해가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위기감을 느낀 듯 하다고 한다. 한미 FTA는 주변 국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익을 얻은 사람과 불이익을 얻은 사람이 나뉘지만 결론적으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비판적인 시각은 갖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양국의 끝없는 논의로 잘 이어져가고 있다.

사진 : 경향신문

글 오주희

4대강 사업 되돌아보기

이명박 정부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을 정비하는 이른바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착공 시작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을 되돌아본다.

사진: 연합뉴스

4대강 사업과 환경오염의 관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륙 수운으로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선 이후 대운하 정책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재정 조달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논란이 많았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기준으로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발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실행되었다. 대한민국의 기후는 여름의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어렵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 유역을 개발하고 정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날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또한 4대강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 유역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결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액이 적게는 1/5, 많게는 1/10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그 실효성을 홍보했으나, 통계자료 분석에 대하여 강수량 피해액은 전혀 줄지 않았거나,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도 통계에 포함하는 등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견도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비판을 했다. 첫째, 4대강 정비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버전일 뿐이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으로

사진 : 경향신문

완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홍수나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아닌, 이미 관리가 잘되고 있는 본류인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셋째, 정기적인 하천 준설의 수준을 넘어 보를 설치하고 강변과 강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을 잃게 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밝힌 것에 따라 4대강을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경우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평범한 소규모 하천이 아닌 국가가 관리할 정도의 중요하고 큰 규모의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환경 전문가들도 정비하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정비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이른 시간에 정비를 마치면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신중한 태도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단기간 공사와 비용 지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증가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반대 진영은 4대강 사업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게 되었다. 1차 감사는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 동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세부계획 위주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사업 세부계획 수립, 설계/공사 발주, 사업 공정 관리 등의 적정성이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2차 감사는 2012년 5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기간의 주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질 관리 및 시설물 품질 위조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관리, 수질 관리,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부분이었다. 3차 감사는 2013년 1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기간의 사업 완료 후 입찰 담합 위주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공정위의 담합사건 처리, 국토부의 담합 대응의 적정성, 추가 담합 여부 및 담합의 원인 규명이었다. 하지만 2차 감사 결과, 3차 감사 결과에서 반대 진영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2차 감사에서는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4대강 사업 때 건설된 보는 소규모 보 설치기준을 따랐으며, 많은 보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질은 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4대강 사업 전보다 수치가 상승했고, 상수원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지 않아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3차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될 수 있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며, 준설토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강을 함부로 준설할 경우 물이 오염될 수 있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이 건설된 이후로 4대강 곳곳에서 폐사한 물고기들이 발견되었고, 일부 공사 구간에서 채취한 준설토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낙동강 공사 지역에서는 준설토가 그대로 강에 흘려졌다. 4대강 유역의 모래톱과 습지도 대규모로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생태계는 많이 파괴되었다. 또한 본류의 저류 용량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져 지천과의 낙차가 커지면서 지천의 유속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지천 일대의 침식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지천 유역의 수량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심지어 지천의 교량이 침식으로 손상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지천유역의 가뭄을 심화시킨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곳곳에서 수질 악화와 함께 광범위한 녹조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사진 : 중앙일보

홍준표 의원도 사대강 사업에 관해 주장을 내세웠다. 녹조는 4대강 주변의 지천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 생활하수에 포함된 질소와 인이 고온 다습한 기후와 만날 때, 녹조가 생겨난다. 녹조는 유수와 상관이 없다. 소양댐은 1년 평균 약 232일의 시간 동안 물이 흐르지 않고, 갇혀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가둬져 있어도, 소양댐에는 녹조가 없다. 그 이유는 상류의 물이 전부 강원도 자연의 물이기 때문에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질소와 인이 포함된 폐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은 녹조가 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조는 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보로 인해서 자연생태 파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결국 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에도 어도가 존재한다.

유럽은 강물을 식수로 1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강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비중이 65%

가 넘는다. 즉 4대강에 강물을 사용해서 식수로 해결하는 것이 65%이다. 만약 4대강 보를 철거하게 되면, 강에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원이 그 자리의 물을 취수할 수 없다. 그 시설로는 강물 취수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식수, 수돗물의 65%는 4대강에서 뽑아 올리는데, 이 수자원들이 6, 7, 8, 9개월에 수자원의 80% 이상이 바다로 가버린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식수 해결 문제도 4대강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환경을 위한 것이라면 4대강 보만 헐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막아 놓았던 댐도 다 헐어버려야 한다. 자연회복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하필 4대강 보만 헐어버리려고 하는가? 그것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싫다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는 "녹조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있었고, 보 때문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종보는 개방 이후 오히려 녹조가 늘었다. 4대강 모래톱 예찬은 바보짓 거리다. 경제성을 따져도 보 해체는 말이 안 된다." 또한 " 금강 유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자원이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리고 "보로 인해 오히려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와 가뭄을 막는 등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면서 "물을 가둬 수량이 풍부해지면 오히려 오염물질이 희석돼 수질이 깨끗해지는데, 녹조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강물을 말린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사진 :금강일보

박 교수는 "지난해 상시 개방한 세종보는 오히려 녹조 생물인 남조류 세포 수가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수문 개방으로 수량이 줄면서 수온 및 영양물질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팔당댐 완공 이후 어류의 증가를 근거로 제시하며 "보를 설치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섞이게 만들어 희석해야 기형 물고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결국 큰 강에는 물이 항상 가득해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보로 강을 관리하는 것이 인류문명으로 프랑스 센강 34개, 영국 템스강 45개, 독일 라인강 86개, 미국 미시시피강 43개의 보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강 유역은 식량자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주민들도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채소 등을 통해 가상수를 먹고 있는 만큼 금강이 마르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보는 여야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생존권의 문제로,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오한음

4대강 사업에 대한 이후 정부의 평가

2007년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맞아 17대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 운송 수로(운하)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반도 대운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한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 환경 문제, 건설 기간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지속적인 논란 속에서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꾸준히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과 반대입장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2008년 6월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파기하였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12월 공식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2009년 2월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졌고 후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 가뭄 방지, 하천 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고. 2009년 7월 영산강 유역 착공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사업 추진 당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여론은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4대강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 대부분은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36.7 반대 49.9%로 반대가 13.2%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정비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야당과 시민들은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사업에 반대하였다. 이때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빚어 공사 현장에서 반대 시위와 고공농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국정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녹색 성장과 녹색 뉴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생각했으며, 4대강 사업을 외국에 지속해서 홍보했을 정도로 자신있어했다.

사업 전만 해도 홍수 등으로 인해서 수재민을 돕자는 뉴스가 수시로 나오곤 했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물난리 등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외에도 가뭄 시 보를 열어 가뭄 해소, 건설 이용직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각종 관광지 적설, 홍수 예방, 지구 온난화 해소, 물 부족 현상 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 효과 등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들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되었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건설하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지속해서 감독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이 건설된 이후로 4대강 곳곳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일부 공사 구간에서 채취한 준설토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으며, 낙동강에 있던 모래톱과 습지 또한 파괴되었다. 4대강 사업이 완성된 이후 곳곳에서 극심한 수질 악취와 함께 광범위한 녹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녹조 현상은 사업 이전에도 일어났지만,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녹조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녹조가 전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 1차 감사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세부계획 위주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사업 세부계획 수립, 설계/공사 발주, 사업 공정 관리 등의 적정성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2차 감사는 주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질관리 및 시설물 품질 위조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관리, 수질관리,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부분이었다. 이 감사에서는 환경기준 설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 3차 감사는 사업 완료 후 입찰담합 위주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박근혜 정부의 평가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라고 요구했고 4대강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헤칠 예정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4대강 보 위치와 준설을 봤을 때 이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고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2013년 7월 10일 감사 결과에서 당시 야권이 제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 이후인 2009년 2월 대통령실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4대강 사업은 그 규모가 커져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보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4대강 사업안이 기존 대운하 안과 차이가 거의 없이 사업 계획이 결정되었고, 일부 지역은 목표 수심은 2m대에서 6m대로 바뀌었다.2013년 7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운하 전제로 4대강 안했다"고 공식 반박했다. "감사원이 대운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은 전체 구간 중 일부이며 한강 등 대부분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면 세종보를 제외한 전체 보마다 다리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는 내용의 반박이었다. 2018년 7월 6일, 정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대운하 추진'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최소 수심이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대통령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대운하'를 추진하려 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보 개방을 지시하여 4대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재인은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의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였고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19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낙동강 지역에서 보 개방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정부는 물러섰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4대강 수문 보를 더 개방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문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의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을 하기로 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보 처리 방안은 2019년도 말까지는 확정하겠다며 한 차례 미루기도 했지만, 그 시한도 지키지 않았다.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은 금강의 세종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철거하고 금강의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기고 나머지를 철거하며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 채로 관찰을 계속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주보를 포함해 3개의 보는 사실상 해체하는 결정이다. 백제보, 승촌보는 해체 결정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해 보를 개방한 채로 더 관찰해보자는 것이었다. 2021년, 주요 보의 상시개방 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미호종개가 돌아오는 등 수변 습지 및 생태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를 모두 개방한 금강은 크게 회복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감사를 시행해서 여러 문제를 적발했다. 2017년 문재인은 취임 직후 4대강의 보 개방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이때 감사원은 그동안 많은 의문을 낳았던 '수심 6미터의 비밀'을 밝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착수했고 낙동강을 최저 수심 6미터로 준설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7년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2월 정종환 당시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보고했으나 정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속해서 수심을 깊이 팔 것을 지시하자 4대강 사업은 진행됐다. 추가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들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점들, 수질 개선의 기준을 적절치 못하게 잡은 점들, 조류 발생 등의 위험요소에 관한 내용을 이명박의 지시로 없앴던 점들, 국토부에서 낙찰차액 등의 4544억 원의 집행 잔액을 은폐한 점들, 실제 물 부족량에 비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해결된 양은 4%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점들, 실제로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많이 악화된 점을 적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섬진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함께 '한국의 5대 강'

으로 불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섬진강을 포함해서 5대강으로 치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0년 8일 낮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제방 붕괴로 이날 이재민 300명 이상이 발생했다. 보수 야권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섬진강 일대와 환경단체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4대강 지류에 대홍수가 발생했다며 4대강 찬성진영에서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글 김민석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인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 사업으로 이명박이 후보에 있을 당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 해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륙수운으로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걸었고, 당시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결국 대운하가 아닌 지금의 4대강 사업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을 먼저 이야기해보자.

먼저 나눌 문제는 녹조문제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찬반을 살펴보자면 녹조로 인한 수질 오염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의견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의 유속과 유량이 감소해 강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더해져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오염물질이 생태계 아랫자리 즉, 세균, 미생물과 식물의 먹이이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습지가 존재하였는데 이 습지에서 많은 세균, 미생물, 식물들이 그런 오염물질을 먹고 또 다음 먹이사슬이 먹는 자연 정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습지가 갯벌과 비슷한 물의 자연정화 기능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사업 이후 이런 습지가 아무것도 없는 호수가 되었다. 이후에 보에 물이 정체되지 않고 다시 흘러가면서 생태계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였던만큼 하천, 강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재제나 정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당시 사업을 서둘러 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실시되지 않아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문제인 오염물질 유입을 제거하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수질 논란은 끊이고 있질 않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측의 입장도 있다. 수질 개선이 되기는 커녕 악화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조사 수치를 보면 악화 된 것이라는 입장은 맞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2018년 7월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감사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6개 보별 수질 개선 및 악화지표수에서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수질이 동일한 곳이 42%, 악화된 곳은 14%임이 드러났다. 여름철 수질 개선 및 악화 지표수 또한 개선된 곳이 33%, 유지된 곳이 52%, 악화된 곳이 15%로 수치적으로는 개선 된 곳이 악화된 곳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 문제 또한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꾸준히 발생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볼 때에 1992년에 낙동강 녹조가 7일 이상 발생, 2001년 전국 댐으로 녹조가 확산, 2003년 안동댐에서 녹조가 발생, 1995년 낙동강과 북한강를 시작으로 녹조가 전국으로 확산, 2004년 태화강을 시작으로 낙동강 수계 녹조 발생, 2007년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 2010년 금강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이전에도 녹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4대강 보의 적법성과 장점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가 아니며.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을 통해서 얻는 수질 개선 효과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공익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 다음으로는 홍수와 가뭄 방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분명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홍수 및 가뭄 개선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홍수, 가뭄 방지 효과에 관하여는 통계 산정방식, 인과관계의 입증, 통계의 해석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 이를 두고 정치적, 학술적 논란이 있다.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 위치나 준성을 보았을 때에 이후 운하 추진을 염두해 두고 시행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허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과거 유사한 규모의 홍수량의 경우와 수위를 비교하여 강별로 2~4m 수위 전환 효과가 있었으며, 강 주변 침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

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지류 피해와 도시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측 주장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1/10 정도로 감소 하였지만 이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첫 번째 동일 기간 동안 조사된, 유사한 조건하의 적어도 2개 지역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가?, 두번째 강우량은 비슷했는가?, 세번째 강우강도는 비슷했는가? 이다. 피해가 감소하였다는 말의 시기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여 온통 물난리가 난 지 14일 후의 발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홍수 피해를 분명히 제외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을 뭉뚱그려 조사하게 되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본 지역,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반론을 제기 한다.

다음은 가뭄 피해이다. 4대강에 대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시행 되지 않아 물은 충분하지만 인근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국토교통위에서는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작은 농업 저수지를 만드는게 낫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가뭄이 많이드는 곳은 주로 상류 아니면 산골 아니면 또 해안지역이다. 4대강 보들은 유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이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로 물을 계속 끌어올려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2015년 가을 충남 서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까지 부족해지자 수자원공사에서는 총공사비 625억원으로 21.9km 도수로와 양수장을 만들어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퍼올렸다.그러나 양수장에서 보령댐까지는 고도 차이가 126m나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약 5억원이나 소요되었고 비가 와서 가뭄이 어느 정도 완화되자 양수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낙동강 상류가 마르는 건 매우 잦은 일이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뭄피해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여 저수용량을 늘리면서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가는 물의 유속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지천 바닥이 침식되고 오히려 더 빠르게 말라 갔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남한강 유역의 지천과 낙동강 유역의 지천에서 발생한 사실이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 관해선 논란이 끊이질 않으나 4대강 사업은 OECD에서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우수사례로 평가 된 바 있다. 가뭄 등의 물부족을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물 관리 선도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줄

사진 : JTBC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낼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된 적 있다.

이렇듯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큰 강을 짧은 시간 안에 개선 시키기란 힘들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정책이였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업의 사전 조사등 여러가지로 부실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 여러가지 정치적 요소, 한반도 대운하 등 이러한 요소를 빼고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가뭄, 홍수 피해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지금과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글 임정민

크리스찬 아카데미, 오원춘 사건, 그리고 유신체제의 종말

북한과 대한민국이 분단된 이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온 큰 과제는 바로 민주화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군사독재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잘못된 행보에 국민들은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한 반정부 세력들을 체포, 연금, 구금을 하는 정부의 행위는 끊이질 않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런데 그러한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마 민주 항쟁이다.

부마 민주 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1979년 5월 3일 '민주회복'을 목표로한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로 당선되자 박정희는 김영삼 의원직 제안을 변칙으로 국회를 통과시켜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등의 사건들을 일으켰고,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그리하여 10월 15일 부산대학교에서는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6일 5,000여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또한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에도 '유신체제타도'와 '정치탄압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출소, 경찰서, 도청, 방송국 등을 공격했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과 창원으로 시위가 확산된다.

10월 20일, 정부는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10월 26일에는 부마사태의 수습책을 둘러싼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도중 김재규는 차지철과 박정희를 권총으로 살해한다. 이렇게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았다.

이러한 항쟁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몇가지 배경이 있다.

첫번째,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79년 3월 9일 크리스찬아카데미 중간집단교육 간사들이 구속 기소된 공안 사건이다. 이 단체는 1959년 강원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걸친 인문사회과학자 및 신학자들과 함께 창설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이다. 이 단체의 자체 프로그램은 3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모임, 연구조사, 교육훈련 이렇게 삼정립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그래서 타 학술연구소나 대학연구소들과는 달리,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과 새로운 역사창조에 관련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1970년대,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지향했던 운동적 성격 즉, 현실, 현장과의 접점과 더불어 사회변혁에의 집합적 실천과정은 강원용이 제창했던 '인간화' 개념을 통해 비인간화를 구조화하는 지나친 비민주적 조직화 및 관료제화에 배태된 비정성을 비판하고, 집합적인 행위만이 구조적으로 파생되는 비안간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2차적 중간 집단의 형성과 연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간집단은 강력한 유신체제 아래 위축된 국민과 지식인들 사시에서 이 둘을 매개하는 집단으로서 사회적 자유와 정의를 실천할 개혁적 주체집단으로 여겨졌다. 크리스찬아카데미는 중간집단의 창출과 더불어 이들의 의식화를 초진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래서 유신체제시기 농민, 노동, 여성운동 등 각 부문 운동들이 활성화되자 정부는 크리스찬아카데미를 의식화의 배후로 규정하고 중간간부 격인 중간집단교육 프로그램의 간사들을 대거 체포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온사상을 유포한 불법 지하 용공서클 사건으로 규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용공서클 혐의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두번째로는 오원춘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79년 5월 안동카톨릭농민회 오원춘을 중앙정보부가 납치,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다. 1978년 영양군은 유휴농지 활용과 농가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군내 5개 면에 가을감자 재배를 적극 권장하며 감자종자를 농가에 배급했으나, 이 종자가 불량이어서 80% 이상이 싹이 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약 780만원 가량의 손실을 얻었다. 이에 '청기감자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군수와 농협 조합장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1979년 1월 23일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들의 지원을 받아 농민들은 피해보상투쟁을 전개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 받았다. 그런데 1979년 5월 5일부터 22일까지 피해보상활동에 앞장섰던 안동 카톨릭농민회 청기분회장 오원춘이 괴한들에게 납치 폭행을 당한다. 오원춘은 6월 13일에 이 사건은 영양 본당의 정희욱 신부에게 보고했고, 그렇게 이 사실은 6월 27일 카톨릭

안동가톨릭농민회
(사진 :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사진아카이브)

안동교구 사제 회의에 이 사건이 보고 된다. 그래서 정의욱, 김기, 유강하, 정호경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 구성됐다. 대책위원회는 오원춘 면담과 자체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7월 5일 오원춘은 '양심선언문'에서 오원춘은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조사단과 농민회 조사단 및 본당 신부 등에게 납치에 관한 사실을 밝혔다. 그 후 7월 17일 천주교 안동교구는 '짓밟히는 농민운동' 이라는 문건을 제작해 이를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조직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18일에는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안동교구 사제단 등이 영양경찰서장과 청기지서장에게 오원춘 납치사실에 대한 답변요구서를 발송했다.

7월 25일 가톨릭 안동교구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원춘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행방불명됐다고 발표하고, 7월 30일 안동 목성동성당에서 제1차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 도중 경찰이 교구청에 난입하여 오원춘, 권종대, 정재돈, 정호경 등을 연행했다. 7월 31일 권종대는 석방됐으나, 오원춘, 정호경, 정재돈 등은 계속 대공분실에 감금됐다.

안동교구는 8월 6일 목성동 본당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전국 사제단 신부, 가톨릭농민회 회원, 평신도 등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원춘사건 전국 기도회를 개최했고, 김수환 추기경은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강론했다. 참가자들은 밤 11시부터 성당에서 안동시청 분수대까지 가두시위를 하면서 "구속자 석방", "농민운동 탄압 중지", "긴급조치·유신헌법 철폐", "종교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전개하고, 안동경찰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가톨릭 농민회원 등 7명이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농민과 사제들 80여명이 목성동 성당에서 8월 22일까지 농성에 들어갔다. 경북도경은 8월 10일 오원춘, 정호경, 정재돈 등을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구속했다. 오원춘이 지난 5월 5일부터 22일까지 포항·울릉도 등지를 여행하고 나서 "모 기관원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15일간 감금·폭행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했으며, 정호경 신부는 두봉 주교의 지시에 따라 오원춘 납치 사실을 조사해 정부가 농민 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는 등의 성명을 날조·전파했다는 것이었다.

8월 15일 대구지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16일에는 가톨릭농민회와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대통령 특별조사령이 공포됐다. 8월 14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 전국사목국장단회의가 열려 안동교구 오원춘사건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전국과 지역에서 개최되는 기도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8월 16일 대표단을 안동 농성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사목국장단은 주교단에 대해 안동사태에 관한 주교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그리하여 8월 20일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명동성당에서 전국기도회가 개최되고, 기도회는 인천, 수원, 대전, 광주, 전주, 마산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9월 4일 1차 공판이 열리고 오원춘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변호인 심문에서 울면서 답변했다. 10월 14일 가톨릭 안동교구 사제단은 '오원춘사건 보고서'에서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고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조작과정이 폭로됐다며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10월 15일 오원춘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12월 8일 오원춘사건 관련자들 모두 선고유예로 모두 석방되었고 같은 날 오원춘도 긴급조치 해제에 따른 구속자 석방조치에 따라 석방됐다.

이 사건 후에도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그리고 잇따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총재직 정치 가처분과 의원직 박탈로 정국은 갈등으로 치달았다. 1979년, 한계에 이른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그렇게 총알 한 방으로 끝을 맺었다.

글 박예빈

Dreamy School